

시론

한국인의 인간관계 소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김영식 남부대 교수·웃음명상전문가

바야흐로 봄이다. 또한 정치의 계절이기도 하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2500년 전 공자는 “근자열 원자례(近者悅 遠者來·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가까운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행복의 첫째 조건이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종 빨리빨리 문화도 있지만, 화를 잘 내는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보’ 수치가 높을 것 같은가? 라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 봤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심지어 한국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는 ‘화병’은 미국에서도 병명 자체도 화병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개인주의가 강한가? 집단주의가 강한가? 라고 질문을 해 봤더니 서양은 개인주의의 한국은 집단주의가 강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논문 연구를 보면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눈보 수치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로 나누기에는 적

합하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성향을 보면 ‘집단주의’보다는 ‘관계주의’가 맞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사실 한국인들은 주변인(친구, 부모, 선·후배 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경향이 크고, 학연과 지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신의 결정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의사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자신이 먹고 싶은 것보다는 상사나 친구에게 먼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물어보고 적당히 자신의 결정보다는 함께 한 사람들의 결정에 따를 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에서도 나보다는 상대방의 위치를 맞추거나 동료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거나 행복감도 떨어지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MZ세대, 5000세대 간의 세대 차이도 바로 개인주의인가? 이기주의인가? 하는 구분을 잘 못해서 생기는 오해들이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과거 개발도상국으로서 고속 성장을 해 나갔던 시대에는 다소 부족해도 유연하게 맞춰가며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최고를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치에서는 좀 더 정교한 인간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은 젊은 세대들도 ‘관계주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온 한국인이기 때문에 현재 부모 세대가 그랬듯이 양육비, 교육비, 자녀 결혼자금, 자녀 주택 마련 자금, 노후 자금 등에 대한 부담감이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요즘 우리 5000세대들이 푸념처럼 하는 말이 자식들을 키워도 자식에게 부양도 받을 수 없고, 제사도 지내지 않을 것이고, 명절이라고 해도 어른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행을 가는 자식들을 자식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K컬처’로 대표되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금의 문화는 다양성보다는 ‘속도’, ‘디테일’이다. 행복의 조건도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관계주의’와 ‘개인주의’를 적절하게 혼합해야 한다. 스마트폰의 부품이 수백 개지만 그 나뉠대로 꼭 있어야 할 부품이기 때문에 한 개만 빠져도 우리는 불편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두리몽실하게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로 때려잡아 일을 했다. 그러나 MZ세대에게 과거처럼 회사에서 네 일과 내 일 가리지 말고 열정을 보이며 관계유무를 해소하라고 요구하는 건 과도한 요구일 수 있다.

이제 좀 더 정확해질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의 부품처럼 정확히 자신의 역할을 지정해 주고,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정확한 선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관계주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의 관계적 갈등 요인을 잘 분석함으로써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초고령화, 고독사, 사회적 불평등, 교육계 문제 등에 잘 대처할 수도, 국민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좋은 선택과 관계를 잘 챙기시길 바란다.

社說

고소·고발과 폭로전 민주당 경선에 주민들 착잡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월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21건, 25명의 위법행위를 적발 또는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7건, 21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며 4건, 4명은 불송치 결정 또는 다른 경찰청 이첩으로 종결 처리했다. 전남경찰은 입건 현황과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예비후보나 지지자들 간 폭로 공방 등으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전화방 운영, 금융투자, 이종투표, 관권선거 등의 갖은 의혹이 터지며, 일부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경찰이 선거가 끝나지 않았으며 함구하고 있으나 예비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구제 내용이 전해지는 상황이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다는 점에서 본선과도 같은 예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예비후보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해야 하며 예측하기 힘든 접

전이 벌어지곤 한다.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폭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결과 발표 뒤에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막상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만다.

그동안의 내부 갈등이 공천을 통해 더 격화되는 민주당이다. 민심의 현주소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낸 집권당인 국민의힘, 대 야당 심판에 나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세력, 진보당과 녹색정의당까지 속속 공천자를 확정하며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예년과 같이 낙승하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시스템 공천’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낙하산 전략 공천도 되레 독이 될 수 있다. 분열을 수습하는 게 급하다. 다른 정당도 공명 선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경찰은 보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다가오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로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임동 옛 방직공장터에 속도내는 ‘더현대 광주’

현대백화점그룹이 현지법인 설립에 이어 복합쇼핑몰 부지 토지 매입을 마무리했다. 현지법인인 ‘더현대 광주’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300억원을 출자해 설립했으며 법인은 임동 옛 방직공장 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한 땅은 1만평이며, 더현대 광주는 이곳에 연면적 약 1만평 규모의 쇼핑몰을 건축한다. 연면적 6만평의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더 크다.

쇼핑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단계인 설계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올해 하반기 건축인허가를 받아 2025년 착공, 2028년 초 새해맞이와 함께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는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카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트 앤드 드 뫼롱’이 맡는다. 2006년 독일월드컵 개막전이 열린 아리아노스 아레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등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혁신에 혁신을 더한’ 첨단 콘셉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옛 방직공장 터 사업계획을 담은 지

구단위계획안(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광주시와 북구, 임동주민센터에서 18일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환경, 교통, 주거정책 심의 등 법적 행정절차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더현대 광주와 함께 어등산관광단지 ‘그랜드스타필드 광주’, 신세계백화점 터미널을 복합화한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등 일명 광주 행복합쇼쇼핑몰 3종세트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현대 광주는 근대 산업문화유산인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친환경, 최첨단기술, 예술, 엔터테인먼트, 로컬 등 5가지 테마가 어우러진 국내 최초 문화복합쇼핑몰로 들어선다. 특히 광주에 미래형 쇼핑몰 건립 경쟁의 물꼬를 튼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의미를 갖는다.

사업비만 1조2천억원이다. 공공 보행로를 건설, ‘일·생활·주거’가 한 곳에서 가능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활력 넘치는 젊음도시 광주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 왜 필요한가



최재화 전남도 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이란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1948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파리 회의에서 토마스 프리처드(Thomas Pritchard)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접목하려는 교육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환경교육’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 이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1975년 유네스코와 유엔환경계획이 세계 최초로 환경교육에 관한 ‘베오그라드 헌장’을 채택했으며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 도시환경 악화와 산림지역이 심각하게 훼손되던 1980~1990년대 환경보전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돼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 등 큰 환경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산업화 이후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은 온실가스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으며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듯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등의 정책적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

를 뒷받침하는 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환경연구원의 2021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친환경 행동 의지도 높은 편이지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 문제가 중요하지만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제라고 체감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이 친환경 행동을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내재화되고 습관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은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과 개선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을 갖추도록 돕는다. 학생 때부터 환경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환경 지식과 정서를 바탕으로 환경 실천을 스스로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및 우리나라에서도 조기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에는 ‘Eco-School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1992년 처음 개발된 국제 프로그램으로 중등부터 고등교육까지 환경 이슈를 해결하는 능력, 미래 결정 능력, 지속가능성과 같은 난제를 학습한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그리스, 영국에서도 시행되면서 국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환경교육이 정식 도입돼 초등학교 1학년년부터 환경교육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또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2021년 1월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고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도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에 적극적이다. 2008년부터 도 환경교육센터(전남자연환경연구원, 신안심생태연구소, 여수YMCA 가사리생태관)를 지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여러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등 4대 분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 찾아가는 환경보전 실천교육, 환경 전문가·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5만명 이상의 학생과도 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지역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어 이를 활용해 환경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등 환경교육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경교육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한 생존의 문제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의 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방법을 익혀야만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스스로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개인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구의 미래가 없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갖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환경교육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독자투고

인터넷 물품 사기 예방법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그에 따른 인터넷 물품 사기도 학생·주부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돼 가는 추세로, 특히 외국 계좌이거나 일반 쇼핑몰보다 20~30% 저렴하다면 의심해야 한다.

물품 사기 예방법을 알고자 한다. 첫째,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 둘째, 판매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 계좌번호,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해 안전결제 시스

템을 이용해서 물품을 받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경찰청 ‘사이버캡’ 또는 인터넷 사이트 ‘더치트’ 활용 사기 계좌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물품 대금 결제 이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캡’이나 인터넷 사이트 ‘더치트’ 웹을 다운 받아 판매자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해 범죄 이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이재훈·정충경찰서 경무계)

넷째, 반드시 증거를 남기고 보관하라. ‘결제완료’, ‘입금증’의 결과물들을 프린트에 남겨두고 사기 피해 발생시에는 사이버범죄센터(http://www.ctrc.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 도움을 청하도록 한다.

이러한 예방법을 숙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할 때 한 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픽 뉴스

한류에 외국인 관광객 ‘젊어졌다’...3명 중 1명 이상이 청년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 이상이 30세 이하 젊은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K-팝, 푸드, 뷰티 등의 한류 인기로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국가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멕시코,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11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한 외래 관광객 1천103만명 중 35.6%인 393만명이 30세 이하로 집계됐다. 이 중 21~30세가 279만명으로 25.3%를 차지했고 20세 이하는 114만명으로 10.3%였다. 31~40세 27만명(2.6%), 41~50세 162만명(14.7%), 51~60세(12.2%), 61세 이상 111만명(10.1%) 등 순이다. 전체 수치에는 승무원 76만명도 포함돼 있다.

또 중남미 국가 멕시코가 같은 기간 26.0%에서 36.9%로 10%포인트 넘게 30세 이하 젊은 관광객 비중이 커졌고 미국은 이 비중이 25.8%에서 28.5%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호주는 26.1%에서 35.6%로, 뉴질랜드는 28.5%에서 30.7%로 각각 젊은 관광객 비중이 높아졌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예전보다 젊은이들이 한국을 더 찾는 데는 ‘한류 영향’이 가장 먼저 꼽힌다.

연령별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2023년 기준 총 1,103만명

20세 이하	10.3%
21~30	25.3%
31~40	20.6%
41~50	14.7%
51~60	12.2%
61세 이상	10.1%
승무원	6.8%

연립뉴스 자료: 한국관광공사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01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